

건설동향브리핑

제498호 (2015. 2. 9)

■ 정책 · 이슈

- 최근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쟁점과 정책적 대응방향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개선 필요

■ 경영 · 정보

- 호주의 건설기능인력 육성 체계 및 시사점

■ 경제 동향

- 1월 CBI,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75.8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초고층 빌딩 건설, 녹지 확충 · 수요 창출에 효과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최근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쟁점과 정책적 대응방향¹⁾

- 건설산업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입찰담합 근절 대책 마련 시급 -

■ 실태와 문제점

- 2012년 말 적발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사건이 2014년 초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사회·경제적인 이슈로 등장함. 2014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이 확인된 것은 18건에 이르고 있음.
- 기 확정 판결되었거나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가 진행 중인 7건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입찰담합 관련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전체 규모는 1조 2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과징금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건설기업은 모두 69개 사임.
 -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 건설기업 중 51개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임.
- 특히, 2014년 중 적발된 18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집중 발주된 대형 건설공사들로서 철도 및 지하철, 경인운하 등 토목사업들과 높은 기술적 난이도 및 공종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수질 관련 시설 등임.
- 최근 적발된 입찰담합은 지난 1993년 이후 20년 동안 적발된 입찰담합 사례와 유형, 행위 방식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 이는 그동안의 입찰제도 개선 및 담합 방지 노력이 실효성이 낮았으며, 건설산업의 선진화 노력이 큰 성과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임.

■ 제재 관련 주요 쟁점

- 먼저 입찰담합 행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분을 모두 포괄할 경우, 4개의 법률(「형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벌금, 과징금,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 말소 등 최대 6회의 중복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적인 제재로 인한 과잉 제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과징금은 부당 이득 환수의 성격과 더불어 재발 방지 차원의 행정적 제재가 포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최근 공공공사 입찰담합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함된다는 견해가 다수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적 제재의 중복에 따른 과잉 제재적인 측면이 강함.

- 기술력을 보유한 다수의 건설기업들이 입찰참가 제한으로 인해 공공공사 입찰 경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국민 및 국가의 경제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의 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건설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됨.
- 해당 건설기업들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해외건설 수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된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은 건설기업들에게 있어 심각한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정책적 대응방향

- 지난 1월 21일 정부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최근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설기업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적 조치가 이어질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면서도 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제재를 모색해야 함.
- 건설산업의 최근 환경을 고려하고 입찰담합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영국 및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일괄 조사 및 제재를 검토하여 지속된 입찰담합 적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환점을 모색하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건설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에 특화된 CP 개발과 CP 도입시 인센티브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입·낙찰제도 및 공사비산정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입찰참가 제한은 과잉 제재이므로 배제하거나 위법성의 경중과 현재의 기업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중복 제재 해소를 위해 과징금을 통한 경제적 제재로의 일원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개선 필요

- 생산자물가지수 건설 물가 반영에 어려움, 건설 고유 가격변동을 적용 모색해야 -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도 개선의 필요

-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건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상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과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가계약법」상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은 생산자물가지수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 지수에는 건설과 무관한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건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실적공사비 단가와 시장거래가격과의 괴리 현상이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개별 건설 프로젝트의 내역 항목들에 실질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주체 간의 합리적인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해외 사례

- FIDIC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 체결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국토교통국의 공공공사 사례에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 of Contract)에 특정 자재가격의 등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조정 대상은 콘크리트, 철근공사와 관련된 자재에 국한하고 있음.
- 일본 공공공사 도급계약 약관에는 1.5% 이상 증가된 공사 금액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고 있음.

■ 주요 발주기관의 물가변동금액 지급 사례 급감

- 최근 5년 간 물가변동금액의 지급추세를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 2,851억원이 지급되었으나, 2013년에는 96억원에 불과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11년에 가장 많은 2,257억원이 지급되었으나, 2014년에는 16억원에 불과함.
- 공구당 평균 지급금액을 보면 도로공사의 경우 2011년 29.1억원에서 2013년 0.92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수자원공사의 경우 2011년 28.5억원에서 2014년 0.46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계약금액 조정시 건설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적용에 따라 원가 손실을 건설기업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실질 건설물가와 생산자물가지수의 괴리

- 지난 15년 간 생산자물가지수가 132.3% 상승한 반면, 건설공사비지수는 198.4% 오른 것으로 나타나 보합세를 보이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달리 건설공사비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건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배경으로 노무비 상승이 자재 등의 하락을 초과하여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방안

- 단기적으로는 지수 조정률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대신하여 건설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들의 가격변동률만으로 한정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등 물가가 안정된 선진국의 경우 1.5% 변동률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세부 조정기준인 3%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자재비 단품슬라이딩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무 직종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노무비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각 지역별 월간 단위의 노무단가가 조사되어야 하는 기반 조성작업이 선행적으로 요구됨.

김우영(연구위원 · beladomo@cerik.re.kr)

호주의 건설기능인력 육성 체계 및 시사점¹⁾

- 교육과 연계된 역량 인증체계 통한 기능인력의 사회적 위상 제고 -

■ 고용노동부, 호주식 직업교육훈련 체계 도입 계획

- 호주는 독일과 더불어 기능인력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체계(Va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가 잘 정비된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힘.
 - 호주의 기능인력 직업교육훈련 체계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Apprentice System(견습생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학습병행제로 번역됨)’임.
 -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11월 7일 호주식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호주 연방산업부와 기술직업교육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함.

■ AQF와 건설기능인력 육성 체계

- 호주는 1995년 학교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원화한 AQF(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를 도입함. 이는 궁극적으로 기능인력의 경력(직업) 경로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함.
 - AQF는 국가 차원에서 10개의 레벨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교육 분야(고등학교, VET 및 대학교)를 커버하는 단일화된 체계로 레벨 6까지가 직업교육의 영역임.
 - 각 수준별 직무역량은 산업별로 정해지는데, 건설기능인력 영역인 Certificat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숙련도 및 지식 습득에 대한 직무역량을 평가받아야 함.
 -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기능인력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ertificate III을 받아야 하나, Certificate III 취득을 위해 반드시 Certificate I, II가 필요한 것은 아님.

■ 건설산업 주도의 건설기능인력 직업교육훈련 체계 개발

- 호주 연방정부에서 직업교육훈련에 관여하는 부처는 호주 연방산업부이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역할만 수행할 뿐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기관은 각 산업별로 구성된 산업기술위원회(ISC)와 기술품질관리위원회(ASQA)임.

1) 본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용역 과제로 수행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실시 연구’와 관련한 호주 출장(2014. 11~19)에서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ISC는 비영리조직으로서 각 산업을 대표하는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12개 산업의 ISC가 존재함. AQF와 관련하여 각 산업의 ISC는 역량 표준(Competency Standards)과 자격, Training Package를 개발하고, 업계에 지식을 제공하며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함.
-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부동산서비스산업기술위원회(CPSISC)의 주도로 현장분석을 통해 AQF에 적합한 건설기능인력의 역량표준 및 자격, Training Package 등이 개발됨.

■ 건설기능인력, 산업체와 밀접히 연계된 Apprentice제도를 통해 현장과 괴리 없이 양성

- 호주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Apprentice과정은 기업-교육생-교육기관 삼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 교육생은 15세 이상으로 취업해 있으며, 기업과 Apprentice계약을 체결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 고용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함. 다만, 이 경우 필수내용은 AQF에 입각해 결정된 Training Package를 따라야 함.
 - 기능인력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주체인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와 민간 RTO(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는 AQF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AQF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TAFE의 교육내용을 보면,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는데, 이론교육의 비중은 대략 20~30%에 불과함. 실무교육은 주로 Apprentice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짐.

■ 범 산업 차원에서 비정규직인 건설기능인력에 적합한 교육훈련체계 도입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청년층 인력의 건설업 진입 기피 문제는 결국 기술력의 단절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 현 시점에서 호주와 같이 기능인력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인증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층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망됨.
 - 현재 도입되어 구현을 앞두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도도 비정규직인 건설기능인력의 현실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음.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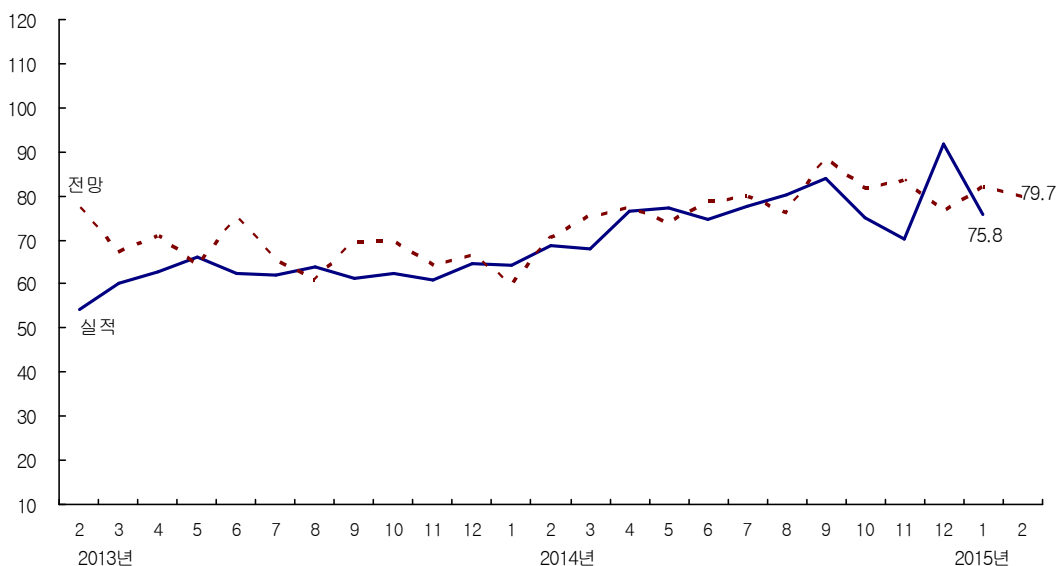
1월 CBSI,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75.8

- 중견 및 중소기업이 지수 하락 주도 -

■ 전월 급등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 계절적 요인 등 영향 큰 폭 하락

- 2015년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¹⁾는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75.8을 기록함.
 - CBSI는 작년 12월에 21.3p 상승해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91.7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함.
 - 이는 전월 급등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통상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이로써 CBSI는 기준선(100.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70선 중반으로 다시 하락하여 건설기업 체감경기의 침체 수준이 다시 악화됨.
 - 다만, 지수 자체는 전월을 제외하고는 작년 10월의 74.9, 11월의 70.4보다는 양호하여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추가적으로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대형기업 지수 전월과 동일,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 큰 폭 하락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함.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0.0을 기록하여 2개월 연속으로 100선을 유지하였음. 공공공사 발주가 축소되는 계절적 요인이 대형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25.1p 하락한 71.9를 기록하여 작년 11월의 70.0 수준으로 회귀했음. 중견기업 지수는 작년 3월 60.7을 기록한 후 꾸준히 70선 중반에서 80선 초반을 유지해 왔으나 다시 70선 초반으로 하락함.
 - 중소기업 지수도 전월 대비 24.1p 하락한 51.9를 기록하여 중견기업 지수와 더불어 CBSI 지수 하락을 주도하였음. 전월 30.9p 급등의 통계적 반락 효과와 함께 공공공사 발주 물량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구분	2014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7.9	76.5	77.2	74.5	77.7	80.2	83.9	74.9	70.4	91.7	75.8	82.0	79.7	
구 모 별	대형	84.6	92.3	92.9	92.3	100.0	92.3	108.3	92.3	92.3	100.0	100.0	100.0	92.3
	중견	60.7	75.9	74.1	73.3	75.8	83.3	80.0	78.8	70.0	97.0	71.9	81.8	78.1
	중소	56.6	58.8	62.5	55.1	53.8	62.5	59.6	50.0	45.1	76.0	51.9	61.2	66.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월 전망치, 1월 실적치 대비 3.9p 높은 79.7 기록

- 2월 전망치는 1월 실적치 대비 3.9p 높은 79.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건설기업들이 2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1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월의 실적치가 작년 12월에 비해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일정 부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통상 2월에도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워 실제로 2월 실적치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30	기획재정부	• 경영혁신과 주최, 'SOC 공공기관 기능 점검 전문가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승우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KDI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주택·부동산 부문) 1주년 평가 좌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주제 : 주택·부동산 부문 실적 및 문제점 평가와 개선 방안
2. 4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정책과 주최, '미얀마 CM 제안서 평가'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실장 참여 - 제안서 평가
2. 5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주최, 'CM 제도 개선 TF 5차 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실장 평가 위원으로 참여

■ 연구직원 모집

- 연구원은 건설 제도 및 정책 연구자(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논문 발표 가능자) 및 건설관리 연구자(박사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로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출신의 건설관리 전공자)를 모집
- 채용 직급 : 연구위원급
- 전형 절차 및 서류 제출 기한 : 1차 서류 심사, 2차 연구 발표 및 면접, 2015. 2. 27(금)
- 문의 및 참조 : 업무지원팀(02-3441-0671), 홈페이지(www.cerik.re.kr)

■ 제12기 서울대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ACPMP) 모집

- 교육 기간 : 2015년 3월 25일(수)~12월 1일(화)
- 교육 시간 : 주 1회,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오후 9시 30분
(특강 및 실무 강의, 토론 및 공동 연구, 정보 교환)
- 원서 교부 및 모집 기간 : 2015년 1월 13일(화)~2월 13일(금)
- 합격자 발표 : 2015년 3월 3일(화)
- 입학식 : 2015년 3월 25일(수)
- 문의 : 서울대 ACPMP 사무국(Tel.02-882-26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업지원팀(Tel.02-3441-0806)

초고층 빌딩 건설, 녹지 확충·수요 창출에 효과적

오늘날 ‘초고층’은 국력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 만약 부르즈칼리파가 없었다면 두바이라는 도시가 그 정도로 유명해졌을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높이 1000m가 넘는 킹덤타워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123층의 제2롯데월드가 시공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초고층 빌딩이 스카이라인을 해치고 교통 수요를 밀집시킨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오피스 장기 수요 등을 토대로 인허가 단계에서의 수급 조절로 해결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이고, 농지가 21%며, 도시용지 비율은 6.4%에 불과해 공원이 부족하고 녹지율도 낮다. 북한산, 대모산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 공원 면적 비율은 3%에 불과하고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런던이나 베를린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도심 땅값이 비싸다보니 대다수 공원이 도시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도심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녹지 확충 수단으로서 초고층 개발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초고층은 단순히 오피스나 주거용 공간뿐만 아니라 멀티플렉스 공간을 확충하는 데도 유용하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부족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학교 앞 호텔 허용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고층 개발은 호텔이나 쇼핑몰 등 복합상업시설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초고층 빌딩은 관광 수요 창출에도 유용하다.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는 개장 이후 한 해 50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영국 런던의 더샤드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등도 해당 국가의 관광객 증가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례로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상시 고용인구가 2만 명에 달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아가 초고층 빌딩은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지방의 구도심 정비나 재생을 촉진하는 수단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국내 건설업체의 기술력은 정평이 나 있다. 부르즈칼리파 등 세계 최고층을 다투는 빌딩은 대부분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시공을 주도했다. 국내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설 과정에서 일부 하자에 대해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있었으나 직접 현장을 가보면 그 기술력에 감탄하게 되며, 공사 관리나 안전 관리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면서 한강변에 펼쳐진 초고층 빌딩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중앙일보, 2015. 1. 14>

최민수(연구위원 · mschoi@cerik.re.kr)